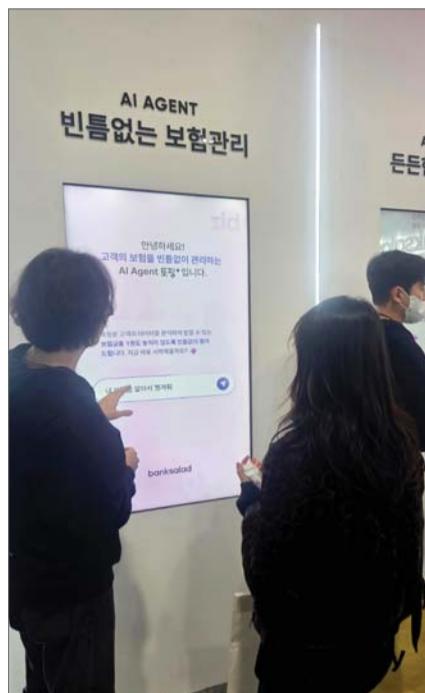


# 탈규제에 금융혁신 바람… 데이터 기반 개인화 경쟁 본격화

금융당국 탈규제 움직임으로  
금융기관 고객 정보활용 가능  
건강관리·상품 비교 추천 등  
수준 높은 맞춤형 서비스 개발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실생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세대 디지털 금융이 송금 및 입출금,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금융업무에 국한됐다면, 2세대 디지털 금융은 각종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한 건강 관리와 소비 최적화, 카드·보험 상품 제시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증권사·간편결제사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으로 고객 정보 활용이 보다 자유로워진 만큼 고객의 보유 상품 정보, 소비 데이터 등 금융정보를 활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펀테크워크 2025'에서 관람객이 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의 서비스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뱅크샐러드는 고객의 높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자영업자의 회계를 돋는 AI 서비스 '토픽+'를 선보였다. /안승진기자

은행권에서는 가입한 금융상품을 일괄 분석해 더 나은 대출·예금으로의 갈

아타기 서비스가 보편화 됐고, 보험업권에서는 가입한 보험의 중복 약관을 분석하고 더 나은 상품이나 특약을 제시하는 상품 비교 서비스가 등장했다. 간편결제 업권에서는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더 나은 결제 방법과 건강정보를 제시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マイ데이터 2.0'의 도입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한 규제 예외 허용 덕분이다.

지난 2022년 도입된 'マイ데이터'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도입 이전에는 펀테크사들이 고객 동의 하에 각각의 정보를 별도로 수집해 관리했다면,マイ데이터 도입 이후에는 금융 기관 간에도 고객 동의 하에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6월 'マイ데이터 2.0'을 도입하고 각 금융사 앱에서 ▲전체 금융자산 조회 ▲본인정보 관리 강

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등 업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순히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한 데 모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금융앱으로 가입한 전체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マイ데이터 2.0 도입 이후 각 금융사는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더 경쟁력 있는 대출·예금 상품을 제시하고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 간에 중복되는 약관을 분석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고객 정보 보호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망 분리'로 대표되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망 분리는 금융사의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망 분리는 금융권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려지만, 외부 기술 도입을 어렵게 했다. 특히 개발 비용 증가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류가 '자체 구축'에서 '구독형 서비스(SaaS)'를 중심으로 이동하면 서 망 분리 제도는 금융권의 혁신을 제

약하는 쪽쇄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샌드박스 규제'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지정된 내용에 한해 규제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융사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 및 생성형 챗봇 활용을 일부 허용했다.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에 각 금융 기관들은 자체적인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시 활용 가능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펀테크 업권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マイ데이터 2.0 도입 이후 고객 정보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기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늘었다"면서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에 따라 각 금융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는 자원도 늘어난 만큼 기존에는 제 공이 어려웠던 각종 서비스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우리금융 차기회장 후보, 임종룡 등 4명 압축

임종룡 현 회장 연임 가능성 무게  
'개인정보 보호' 외부후보는 비공개

우리금융 차기 회장이 임종룡 현 회장과 포함한 4명으로 압축됐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임종룡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 후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됐지만,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말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후보군을 대상으로 ▲내부 및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경영성과 ▲최고경영자 육성프로그램 결과 ▲리더십 등 평판조회 결과 등을 점검했다. 이어 이달 1일 롱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숏리스트 후보군을 확정했다.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4명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다.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회장은 취임 이후 우리금융의 체질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금융은 타 금융지주 대비 은행 계열사(우리은행)의 매출 비중이 큰 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우리 투자증권을 종합증권사로 전환하고, 올해 5월에는 동양·ABL생명의 합류 이후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체질 개선도 한창인 만큼 내부 인사 출신의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정진완 은행장이 올해 초 취임한 만큼 은행 임기를 많이 남겨두고 있어, 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4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약 한 달여 간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프리젠테이션) ▲심층 면접 등 면밀한 검증 및 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  
LH-SH 서리풀 전담 보상팀 가동

앞으로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에 대한 보상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사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 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의 경우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걸렸다.

국토부는 내년 1월 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개정 특별법이 공포된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내 보상 현장조사용 역을 별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텔레그램·오픈톡방 불법 가상자산업 주의

신고가상자산사업자 27곳 공개  
명단 미포함 사업자는 모두 불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통해 급증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2일 27개의 신고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불법 취급업자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교환 등을 알선하거나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업자를 블로그·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한 법안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

FIU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유형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된다면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이달 말까지 1400억 추가 공급 예정

IBK기업은행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모험자본 2.5조원을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약 3000개 기업에 ▲2023년 7641억원 ▲2024년 9865억원 ▲2025년 11월 누적 8096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했으며 이달 말까지 14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이 2023년 이후 모험자본을 공급한 라온텍(디스플레이), 에이직랜드(반도체), 에이피알(화장품), 그래피(소재), 아우토크립트(보안), 지투지바이오(바이오) 등 34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는 쪽쇄가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에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IBK기업은행 전경.